

I. 전문가들이 바라본 2009년 여성·가족 정책 주요 쟁점

1. 여성 노동

1) 여성 일자리

☞ **경제 위기로 여성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증대됨** 이는 97년 외환위기 후 최소한의 정규직과 다수 비정규직을 활용한 시스템으로의 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경제위기결과 30, 40대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저임금 직종에 집중된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경제 위기는 여성에게 최우선적으로 타격이 되지만, 그 쟁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 성별 분업 등의 문제와 맞물려 해결해야 함

- 동일 노동 시장 내에서의 여성 차별 존재.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이 기업 내에 한정되어 있어 기업 외부로 확대되는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지 않기 때문임. 이 원칙을 기업 외부까지 포괄하는 제도가 필요함.

- * 주목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 이에 대해 여성학자들의 방향 제시가 필요한 계약 기간 연장이 여성의 경제력에 미치는 결과를 엄밀히 예측하고 연장여부로 인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야 할 것임.

- *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88CC 경기보조원 부당징계 무효확인소송의 승소는 주목할 만한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사각지대와 노동권 훼손의 대표적 사례

☞ 여성부는 기존의 성인직적 관점에서 여성편의 향상과

성주류화에 주력하던 모습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 노동력 활용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연계사업에 전력하며 그 동안의 여성정책이 확대를 당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음. 그간 사회교육에 치중하던 여성회관을 여성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전환 하려는 시도나 새일센터를 지정해서 여성인력개발 자원을 강화한 것이 그 예.

2) 새로운 노동 형태·돌봄 노동 중심

☞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돌봄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 부문이 주요한 이슈가 됨. 돌봄 일자리 노동자의 상당 부분이 4~50대 여성인데, 처우가 열악하고 노동권도 지켜지지 않아 실태조사와 조건 개선이 필요함. 사회적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의 질 개선이 요구됨.

〈표 1〉 주당 근로시간 및 일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소속			지역		
			영리	비영리	소속없음	서울	경기	기타
가사	주당근로시간	30.4	33.6	28.3	-	34.7	28.0	28.8
	일당근로시간	6.9	7.4	6.6	-	7.6	6.6	6.6
간병	주당근로시간	107.2	111.7	103.8	-	114.7	106.9	92.8
	일당근로시간	19.3	20.3	18.5	-	20.7	18.8	17.1
재가보육	주당근로시간	47.1	45.2	48.1	47.0	57.4	38.2	41.3
	일당근로시간	9.1	8.9	9.2	9.2	10.9	7.7	8.1

* 주: 일당 근로시간은 일주일당 총 근로시간을 일주일당 평균 근로 일수로 나누어 측정됨.

자료: "가사, 간병, 보육서비스 일자리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08.

〈표 2〉 현재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전체	영리기관종사	비영리기관종사	소속 없음
가사	79.7	86.3	75.2	-
간병	128.4	128.1	128.4	-
재가보육	69.9	86.7	56.6	73.5

자료: "가사, 간병, 보육서비스 일자리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08.

- 현재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은 사회적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고착화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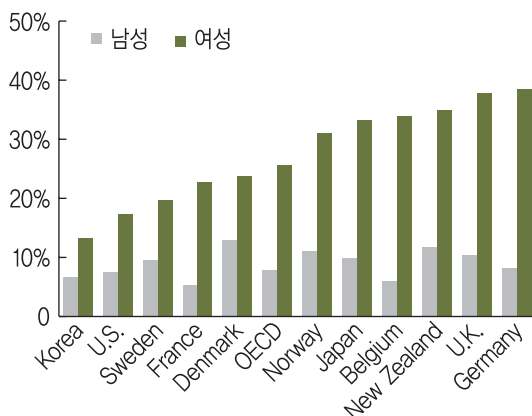
☞ 돌봄 노동, 가사 노동, 성 노동 등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

2. 일·가족 양립

☞ **여성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일·가족 양립지원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의 제공, 양질의 일자리가 요구됨

- 경제 위기로 인해 2인 소득자 가정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여성 또한 취업을 생애 과업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예 실제 일·가족 양립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
- 일에 대한 개념 전환 근무 시간이나 근무지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 육아 휴직 유연근무제 지역사회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산 등.

〈그림〉 OECD 주요국의 part-time 근무 비율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 음주문화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 특히근무 후 회식문화는 일·가족 양립을 저해한 이러한 문화로 인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여성은 무능한 직장인으로 인식됨.

- * 음주가 과도하게 동반된 직장회식은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를 낳기도 함

☞ 일·가족 양립의 가장 큰 수요층은 아이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젊은 직장 여성들. 이들을 위한 직장 제도, 문화 조성이 필요.

- 젊은 세대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기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구축은 여성노동의 생산성 증대, 양성평등 문화증진, 저출산 개선에도 기여할 것임

- 이 점에서 볼 때, 시설보육중심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지원제도(일명 아이돌보미제도)를 도입한 것은 육아부담경감 차원에서, 또 취업여성들의 일·가족 양립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보육의 대상을 미취학아동에 국한하던 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경우에 따라서는 고학년도 포함) 포함시키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방과후보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면서 맞벌이가정의 자녀양육고충을 덜어주고자 했다는 점도 2009년의 중요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일·가족 양립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 이를 사회 공공화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3. 성 평등, 인권

1) (아동)성폭력

☞ 올하는 예년에 비해 특별히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으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주요 이슈로 부각됨**. 이를 계기로 양형 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깰 만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부장적 법조계의 관행이 논의되는 등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음.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동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예방 조치나 가해자 처벌이 미약.

- 가해자 처벌 중심의 접근에만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임 생존자 보호와 생존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필요 성폭력만이 아닌 광범위한 의미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해방'에 대한 담론의 부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 특히 가정 폭력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의 개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함

- '강호순 사건'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함. 이 사건은 실제 범행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 일반을 잠재적 피해자화하고 두려움을 통해 삶의 방식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

* 성폭력에 대해 법과 사회적 인식 사이에 괴리가 존재. 특히 젊은 세대는 동의 없는 성접촉은 성폭력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나 이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적 장치는 부자연 상태. 일반인, 젊은 세대의 성윤리에 맞는 법의 제정과 운용이 필요함.

2) 성매매, 성 상품화

☞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당시에 논란을 일으켰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인권 존중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 제도적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궤를 같이 하지만, 그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자, 성구매자, 성매매 여성의 수는 많은 실정. 식민지배, 전쟁, 미군주둔, 빈곤의 경험은 성산업 확장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높은 수준의 법적 장치를 갖춘 만큼 그에 걸맞는 집행 시행이 필요.

- 성매매 축소 정책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성인권을 위해 필요.

☞ 한 여성 연예인을 중심으로 사용된 '꿀박지'라는 용어는 성 상품화에 대한 사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줌. 이 용어에 대해 한 고등학생이 여성부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가 관찮다는 이유로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림. 언론의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며 더 많은 성희롱을 불러일으키거나 방지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장차엔 자살 사건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남. 연예자본의 여성의 성에 대한 착취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선정적 주목의 대상이 되었을 뿐,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여성 연예인의 성은 대중의 소비대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연예자본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고 착취되는 만큼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3) 군 가산점

☞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에 대한 부활 주장에 대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구조와 문화적 차별과 연관된 성 불평등 문제의 초점이 생물학적 차이의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징병제로 인한 남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은 필요하지만 그 해법이 성차별을 강화하는 방식 이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어야 함.

4) 혼인빙자간음

☞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됨.

4. 성 주류화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 정책의 핵심**. 성주류화가 양적으로는 확산되고 있으나 정책 추진단계에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어 질적 확산 방안 모색이 필요.

* 하나의 좋은 예가 여성친화도시 계획임. 여성정책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환경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중심에서 도시계획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성 주류화 시도라고 볼 수 있음.

* 기업 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 그러나 대략은 의식 제고용 컨퍼런스, 포럼 개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5. 가족

☞ 2006년부터 가족정책이 다문화가족정책에 쏠린 듯한 느낌을 줄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나옴. 결혼이주여성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면서도 가족의 관점에서 한국인 남편이나 시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 외국인 부모와 자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되고 실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족단위 정책의 좋은 예로 보임. 또한 현장중심의 핵심 정책추진체계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의 확대, 운영사업의 다각화 등도 주목할 만한 이슈.

- 그러나 전반적인 가족 정책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수혜적 차원에만 집중한 감이 있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열린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 여성이 독자적으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 측면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반등했던 출산율이 2008년 다시 하락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 이에 대한 대응정책들은 여성·가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특히 고학력의 30대 미혼자 증가가 저출산을 심화시킴. 남성 청년군의 고실업 현상, 높은 결혼비용,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함.

6. 녹색성장

☞ **녹색 성장 시대에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주요 이슈**가 됨. 그러나 녹색성장의 한 청사진에는 여성의 역할이 잘 드러나 있지 않으며, 여성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문제제기 단계에 놓여 있음.

- * 그린 커뮤니티를 하나의 대안으로 들 수 있음. 여성정책이 일상에 밀착하고 여성들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으로 내려가야 함. 그린 커뮤니티는 평등과 공유, 소통,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여성정책의 영역이나 지향점을 폭 넓게 할 수 있을 것임
- * 음식문화 개선도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 한국 식생활은 먹을 수 있는 양, 종류 이상의 반찬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원낭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공공 보건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생활 개선이 필요.

II. 전문가들이 전망한 2010년 여성·가족 관련 쟁점

☞ 2010년 경기회복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청년 여성 취업은 다소 개선될 것임. 그러나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지속 여부에 따른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 여성취업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것임.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증대에 힘입어 여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함으로써 여성고용 위기를 타개해야 할 필요성 증대

* 녹색뉴딜사업: 2012년까지 90여만개 일자리 창출. 27개 중점 녹색기술지원분야에서 2012년까지 약 48만개 일자리 창출 →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성장과 동시에 환경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동시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로의 여성진출 가능성 전망

- 알·가정 양립을 목표로 한 정규 파트타임직종 등 다양한 고용형태 발굴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할 것임.

* '08년 여성의 OECD 평균 단시간근로 비중은 25.3%인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단시간근로 비중은 13.2%에 불과

- 2010년에도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여성고용 문제와 모성보호 해결의 관건이 될 것임

- 시장 중심의 저임금 사회서비스 대신 공적 차원에서의 사회 서비스 창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임

– 사회서비스 취업비중: OECD국가 평균 21.7%('03), 한국 13.8%('07)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sexuality)' 과 인권·안전 관련 이슈들이 사회의 주요 이슈로 지속될 것임.

-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 개선 요구 증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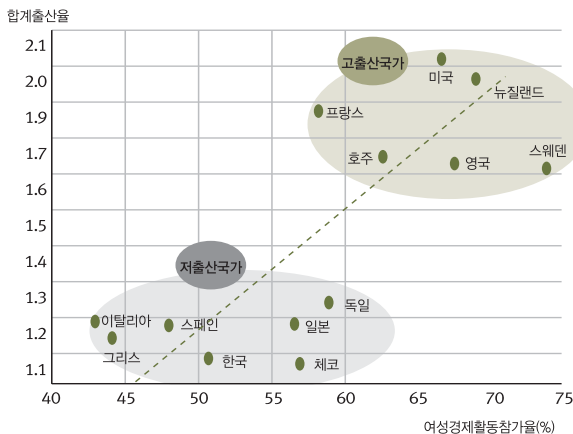
–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839건 중 무기징역은 0.4%, 벌금형 42%, 집행유예 30%를 선고받아 과대한 처벌을 보이고 있음

☞ 저출산 사회를 맞아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대 둘 다를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 지속될 것임

- 저출산 대응 및 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강화될 것임

〈그림1〉 OECD 주요국의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율의 관계



- 저출산 대책·가족정책 등은 맞벌이 부부를 주요 정책 대상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종 정책이 설계될 것임

- 고령화 심화와 베이비 부머의 은퇴 등으로 재정부담이 급속히 증가하여 세대 갈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임

* '05년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5년에는 약 3명이 노인명을, '40년 약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전망

- 2010년은 [제2차 새로마지플랜 수립시기로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이 주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임.

☞ 성 주류화 심화의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 및 성별 영향 평가 제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음

- 2010년은 성인지 예산 도입 2차년도로서 1차년도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1년도 예산서 작성 방향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도 양적인 확장을 추구하던 데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로 관심이 이동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에 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10년 치러질 민선 5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성의 지역 정치 참여확대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될 것임

- 지방선거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성할당제' 등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도 활발히 논의될 것임.

– 18대 여성국회의원 비율: 13.7%

– 민선4기 지방의회의원 비율: 14.5%

☞ 한부모가족, 빈곤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지속됨과 동시에 다문화 가족, 미혼모 가족, 조손가족, 이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 문제도 이슈화될 것임

III. 2010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

1. 여성 일자리

1) 현황 및 예측

☞ 2010년 경기회복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청년 여성취업은 다소 개선될 것임 그러나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지속 여부에 따른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 여성취업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것임

- 경제성장률의 회복과 함께 녹색성장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신성장동력부문에 여성 취업기회 확대를 기하는 정책 수요가 증대함.

–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대응, 에너지산업, 자원개발/관리, 신성장 동력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등에서 여성 진출이 기대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경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의 확대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문제가 대두될 것임.

☞ 2010년에도 저출산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고용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대가 주요 국가의제로 대두될 것임

☞ 또한 사회복지 확충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부문 여성종사자의 취업조건 개선 등의 문제가 의제화될 것임

2) 대응전략

☞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외받기 쉬운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시킴

☞ 녹색성장과 관련한 신성장동력 부문에 필요한 여성인력 양성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함. 이와 함께 여성이 성장 동력부문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관행을 개선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취업능력 제고, 정규직 전환기회 제공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용이하게 함.

☞ 사회서비스부문 여성종사자의 종사상지위가 다양하여 전담 행정부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함 그리고 이들의 취업조건 개선을 위해서 돌봄종사자의 유형별로 대책을 수립함.

2. 성폭력 · 인권 · 안전 등

1) 현황 및 예측

☞ 아동성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법원에서의 선고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양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건은 2004년

721건,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으로 나타나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업소가 등장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음

- 성매매 정책에 대한 최근 세계적 동향은 성구매자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이밖에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격차지수에 의하면 130개국 중 115위로 나타나 여성의 능력이 충분히 양성 활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2) 대응전략

☞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며 심층적인 아동 성폭력 연구와 아동 성폭력범의 재발 방지 및 여성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성매매방지를 위해서는 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방안 청소년 성매매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주체가 성매매 확산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함.

☞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성을 위한 인식 제고, 의사 결정직에의 여성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함.

3. 성 주류화 심화

1) 현황 및 예측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그간의 확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고 여성부의 성주류화 중심도구로서 자리잡게 될 것임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성인지 예산은 특별히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되나,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통합하여 정책을 개선한다는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양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요구가 높아질 것임.

☞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책 의제의 일환으로 지방 정부의 성주류화 제도 마련에 대한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지방재정법」내 성인지 예산조항을 첨가한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었음

☞ 2010년 G20 정상회담 개최, 2010년 OECD/DAC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성주류화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

2) 대응전략

☞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수렴하여 형식적인 문서가 되지 않고 제도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 및 참여 유인 부족, 담당 공무원의 예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권한 부족, 관련 기관간 안정적 협력체계의 미흡, 제도 시행에 대한 낮은 대중체감도 등이 해결 과제임.

☞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지역정부 정책에서의 양적 확대 추세를 중앙정부 정책으로도 이어지도록 하고, 대상사업 선정, 평가지표, 추진체계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음.

☞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높이도록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분석, 성인지 통계분석 등 각 영역에서의 연구결과를 결집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용성 높은 방식으로 홍보함.

☞ G20 정상회담, OECD/DAC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성주류화 사례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여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피드백을 받아 제도개선을 하는 일거양득 추구.

4. 일-가정 양립지원

1) 현황 및 예측

☞ 저출산 사회를 맞아 사회성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짐.

☞ 일과 가정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기업과 가정내 양성평등 환경이 미흡하고, 핵가족화 등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돌봄기능 미약에 연유함.

- 단시간 근무제 등 유연한 근로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고,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도 잔존

* '08년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42.5%에 불과

* 설치의무사업장 보육시설 설치율:('06)20%→('07)26%→('08)28%

- 양성평등의식 미흡, 세계 최고의 연간 근로시간,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인한 남성의 가정내 육아와 가사분담 부족

* 실근로시간: '07년 독일 1,433시간, 영국 1,760시간, 미국 1,794시간, 한국 2,316시간

〈표 3〉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의 가사노동시간 비교

구 분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부인	남편	부인	남편
가사노동시간	3시간 28분	32분	6시간 25분	31분

-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비공식적 가족지원망은 약화되는 가운데, 취업여성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미흡하고, 특히 0~2세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취약

2) 대응전략

☞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장복귀가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장의 대체인력채용지원을 내실화 하기 위해 인력풀 관리 강화 등 대체인력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업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야 함

☞ 알·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확산 정착할 필요 있음

-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입에 필요한 인사관리기법 및 증가되는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기업에 일·가정 양립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센티브 대폭 강화할 필요

☞ 취업모 중심의 보육지원을 강화해야 함.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민간 보육 시설의 질 확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치·운영 지원 확대 등을 병행하여야 함

- 취업모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 및 자녀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도 필요함.

☞ 실근로시간 단축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통해 알·가정 양립 사회를 앞당김.

5. 가족정책

1) 현황 및 예측

☞ 비혼인가구, 한부모가구, 근로빈곤가구, 맞벌이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는 가족가치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족정책을 필요로 하게 됨.

- 혼인율의 감소는 만혼 혼인의 연기, 비혼인가구 등으로 나타나 저출산의 핵심원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므로 비혼여성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 여성고령자가구, 한부모가구, 근로빈곤가구 등 취약계층 가족의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 사회보장, 교육 및 주거 건강 등 다방면의 종합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여성가구주가족은 2008년 22.1%로 전체 가구의 7~8%에 달함

* 근로빈곤가족은 2009년 현재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

-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상별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사업의 다각화 등이 이루어져왔음. 향후엔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대상이 아닌 한국사회성원으로서의 참여와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사회통합적 가족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2) 대응전략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사회문화 정착에 주력해야 함

- 남성의 가사 및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부모 휴가의 아버지 할당제 도입, 육아호봉 인정, 정시출퇴근 문화의 정착 등)

☞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 및 가족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일하는 가족돌봄자에 대하여 일과 돌봄 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법정유급휴가로 제도화

- 돌봄대상자와 돌봄자 및 그 가족의 돌봄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을 중개할 수 있는 통합적 돌봄서비스 자원센터 마련